

10년 후 의사 1만5천명 부족... 의대정원 2천명 늘리나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조만간 증원폭 결정할 듯
전공의 연속근무 줄이고 전문의 중심 전환...전공의 달래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형사처벌 부담완화·의료사고보상 확대

정부가 2025학년도에 맞춰 조만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대학들의 희망 증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2000명대가 될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과 함께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지역의 의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환자나 수술 환자를 다루는 분야의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형사처벌 부담완화,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의 시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10년 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10년 안에 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조만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들이 2035년 의사가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기간 등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 10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큰 폭의 입학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폭이 당초 예상됐던 1000명대를 넘어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대학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한

계 추진할 필수·지역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을 패키지로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다.

복지부는 패키지의 일환으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전공의 달래기' 대책을 내놓았다.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힌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 뒤, 법제화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전공의 중심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끝낸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전공의가 응급 당직 대응의 핵심을 담당하는 등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 장시간 근무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른바 '5대 대형 병원(백5)'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지역의 의사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복지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나눔온도 100도 넘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나눔목표액 50억 7천만원

나눔의 온도 109도 달성

나눔온도 100도 초과달성!
한 정성, 광주가 더 행복해짐!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을 마감하는 행사가 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사랑의 온도탑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0억7000만원을 목표로 진행한 나눔 캠페인에서 총 55억3000만원이 모여 109.3도를 이뤘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 소방차 진입불가 4곳...화재 '속수무책' ▶6면
복스 - '그림의 운명' '곰팡이' ▶14·15면
KIA 최형우 '타이거즈'에 기을 DNA 심겠다 ▶18면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 올린다 국회 의결, 2025년부터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를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었다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법개정안 국회 통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